

수수료 의존 한계… 코인거래소, 법인 선점·상품개발 등 사활

금융위 FIU, 작년 국내시총 줄어 실명거래·김치 프리미엄 영향에 국내 투자자, 해외 거래소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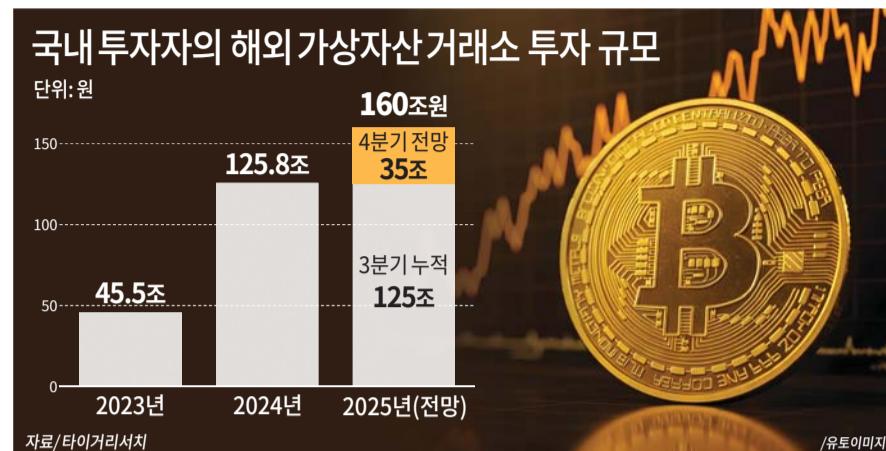
업비트·빗썸 등 국내거래소 5곳 법인회원 서비스 오픈 등 경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다가올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법인 거래 인프라 구축과 고객 사전 유치, 외연 확대 등 수의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수수료 인하와 점유율 확대 전략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생상품 취급 금지와 금기분리 원칙 등 규제 환경이 여전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투자 해외 이탈 가속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1077만명이다. 2024년 말 970만명에서 6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늘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3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도 110조5000억원에서 9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 증가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만 16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의 45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가량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투자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거래는 불가한 만큼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이 불일치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발생한다. 관련 법령의 부재로 해지(가격 하락) 회

피)·위험 분산·수익 극대화 등에 활용 가능한 파생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의존한다.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된 만큼, 거래소 간 경쟁도 거래 수수료 인하·면제 등 수수료 경쟁과 점유율 확대에만 국한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줄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 가상자산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점유율 경쟁도 어렵고, 점유율 확대 시에도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인 거래·외연 확대 등 '활로 물색'

개인 투자가 해외로 빠르게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가 기대를 거는 것은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6월 비영리법인의 거래는 허용됐지만, 당초 작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현안에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업권에서는 올 상반기 중 법인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활발하다. 5개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거래소홈페이지 내에 법인 회원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포트폴리오 분배 사전 상담 제공, 법인 회원 전용 상담원 배치, B2B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한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거래소들은 경쟁력 높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외연 확대도 추진한다.

업비트는 네이버와의 결합을 통해 I T와 결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슈퍼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을 통해 상품 다양화, 투자 전문성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고팍스도 2년 넘게 늘어졌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빗썸은 상반기를 목표로 거래소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매출 확대 전략을 준비중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규율 명확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기본법은 지난해 말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은의 견해차가 이어지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명확화를 기대하고 영업 확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입법 시기와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입법이 밀리면 업권의 침체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KDB생명 새 수장에 '영업통' 김병철 내정

내달 주주총회서 대표 선임 마무리
재무·영업 정상화 로드맵 본격 가동

KDB생명이 수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김병철 수석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 후보로 정하고 오는 2월 주총을 통해 대표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승태 현 대표 임기 만료 이후 후임 인선이 길어지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인선은 재무·영업 정상화로 드맵을 본격 가동하는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자본잠식과 '실질 건전성' 회복이란 과제를 떠안았다. 영업·채널 전문가로 분류되는 새 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KDB생명은 최근 수년간 금리 급변과 자산·부채 평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재무 체력이 악화했다. 지난 2025년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가 약 -1000억원대로 내려앉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산은은 재무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1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주당 5000원에 신주 1억300만주를 발행하는 구조로, 최대주주인 산은이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자를 '재무제표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면서도, 곧바로 체질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자본이 흔들리면 신계약 확대에 필요한 채널 경쟁력도 떨어지고, 수익성 낮은 판매 확대는 오히려 자본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결국 자본을 보강한 뒤에는 상품·채널 믹스를 손질해 '질 좋은 성장'을 만들 어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전성 지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진다. KDB생명은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K-ICS(지급여력 비율)는 경과조치 적용 시 176.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지만,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43.3%에 그쳤다. 경과조치는 제도 전환기 충격

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 별기'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는 실질 자본을 쌓아 격차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 최소치(100%)를 기준으로 보면, 경과조치 전 수치는 구조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자본잠식 해소와 K-ICS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증자 이후 경과조치 적용 K-ICS가 30~40%포인트(p)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단순 '수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익성 있는 신계약을 확보하고 자산·부채 관리(ALM)로 자본 변동성을 줄이는 '영업 기반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김병철 내정자가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대목에서 연결된다. 김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메트라이프 총괄 본부장, ING생명 채널전략 부문장과 신채널(GA·BA) 총괄, AIA생명 영업채널 총괄, 푸본현대생명 전략영업본부 총괄 등을 거쳤다. KDB생명에는 수석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라오 린 ICBC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 아파트값 0.18% ↑… 48주 연속 상승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6%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48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 및 매수분위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3%)가 하왕십리·금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

(0.26%)는 이촌·문배동 위주로, 중구 (0.25%)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성산·공덕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동작구(0.37%)가 사당·상동 위주로, 서초구(0.27%)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27%)는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8%, 0.05%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본 건전성·유동성 조달 등 기대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경제 사절단 자격으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5일 중국공상은행(ICBC)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협력 구조 고도화 및 중장기 금융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진 회장은 라오 린 ICBC 회장과 함께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통화스왑 확대'를 포함한 자금 조달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 및 기업금융(I-B)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한금융과 ICBC는 지난 2008년부터 원화·위안화 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해 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후에도 신한금융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위험가중자산(RW

A) 관리, ICBC의 한국 관련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상호 목적에 따라 자산 관리 협력을 지속해 왔다.

양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기존 통화스왑 규모 확대와 함께 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운데 중복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외화 조달 비용 절감 가능성 등 중장기 협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단순 거래 확대를 넘어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조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대외 금융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적 협력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옥동 회장은 "ICBC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보유한 파트너"라며 "신한금융은 ICBC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그룹 간 실질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동 성장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